

# 정부, 내년 재난안전예산 18.2조 요구

### 올해비 8% ↑ ... 행안부, 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확정

중앙행정기관이 내년 재난안전예산으로 쓰겠다고 요구한 금액이 18조 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2021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내년 예산 요구액은 399개 사업 18조 2000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배분·조정하는 연구개발(R&D) 사업비는 제외된 액수다. 최근 3년(2018~2020년) 사이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 16조 7000억원보다 8.1% 늘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분야가 전체의 76.9%인 14조원으로 가장 많다. 복구 분야 2조 8000억원(15.4%), 대비·대응 분야 1조 4000억원(7.7%)이

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2조 8000억원(15.5%), 도로교통 재난·사고 2조 7000억원(14.7%), 철도교통 재난·사고 2조 2000억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요구액으로는 올해 대비 68.5% 증액된 8000억원을 요구했다.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한 결과 399개 사업 중 160개(40.1%, 9조 6730억원)는 투자 확대가 확정됐다.

160개 사업 중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최근 이슈화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사업 40개(6조 4000억원)가 포함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8개(3000억원)가 추가됐다.

199개(49.9%, 7조 9693억원) 사업은 투자 유지하고 나머지 40개(10%, 5516억원)는 예산 집행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이 부족하고 피해 저감 성과가 타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해 내년 예산이 깎이게 됐다.

사전협의안에서 제시한 재난안전예산의 4대 투자 방향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미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즉각대응팀 및 긴급상황실 운영사업'(122억원), '가축전염병 방역 장비·약품 지원사업'(977억원), '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정확도 향상을 위한 레이더 도입사업'(113억원), '폭염 적응설비 확산 사업'(40억원) 등이 추진된다.

반복되는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및 보행자 통행 시설 정비사업'(2551억원), '산재사고 방지시설 설치사업'(1917억원), '자살 예방사업'(454억원), '고시원 등 취약 시설 대상 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

(57억원) 등이 시행된다.

기반·생활 시설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도로교량·터널 보수·보강 사업'(7043억원),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조기구축 사업'(15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5766억원), '철도 시설·설비 개량 사업'(1조 2869억원), '국가하천 제방·보 등 치수시설 점검·보수 사업'(227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사업'(2176억원), '취약계층 대상시설의 기능보강 사업'(519억원),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운영사업'(493억원) 등에 우선 투자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방관·교회감염, 개인·사회방역 미준수”

### 정은경 본부장 “유행기 밀폐·밀집·밀접한 대면 모임 피해야”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방문판매 업체와 교회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29일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최근(감염이)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또는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이 미흡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까지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 종교시설 관련 집단발병 사례로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28명, 경기 안양 민간구 주영교회 관련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방역을 ‘개인 방역’

과 ‘사회 방역’ 두 가지로 나눴다. 개인 방역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으로 감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반면 사회 방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통한 감염병 전파 규모 축소를 뜻한다.

정 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모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이 미흡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중장년층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위중 환자의 사망자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하지 않도록 개인 방역과 사회 방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기라는 어려운 속에 자신과 가족, 이웃, 우리 공동체가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밀폐·밀집·밀접한 대면 모임은 피해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원칙을 생활화해 줄 것으로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정부24'로 신청하세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전국 1만여 개의 초등학생 돌봄교실정보를 한 번에 검색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9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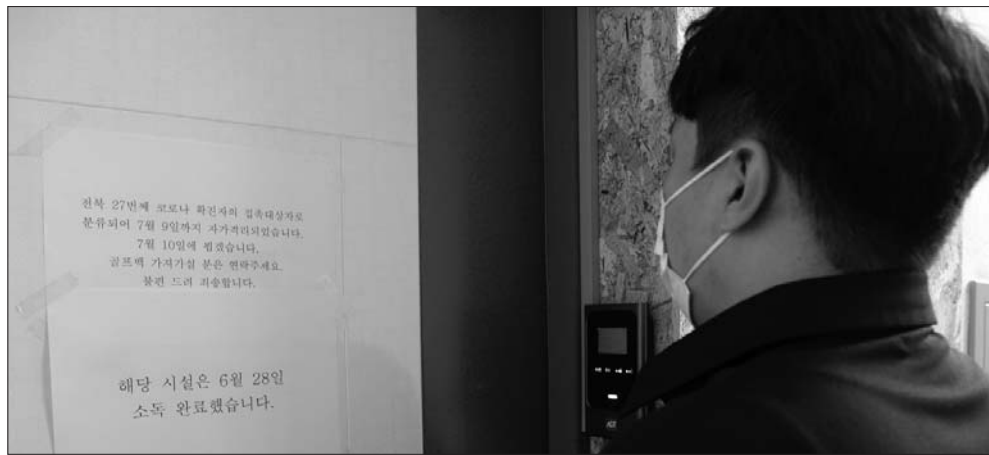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부처와 돌봄시설별로 개별 사이트에서 돌봄교실 정보를 제공해온 탓에 학부모들이 일일이 찾아봐야 했고 제공되는 정보조차 미흡해 별도 문의를 해야만 했다.

일부 시설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직접 방문해야 하고 맞벌이 등 일소 우선순위 증명 구비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정부24에서는 지역·서비스별 상세 검색과 지도보기를 통해 돌봄시설 위치와 프로그램, 모집 현황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희망 서비스는 최대 3지점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서식은 필수정보 위주로 간소화하고 행정정보공공이용을 연계해 텍스트 입력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결과는 정부24 마이페이지(My Gov)와 신청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를 대상으로 우선 제공한다. 내년 신청기간까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뉴시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들어갑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실내골프연습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29일 문이 닫힌 골프연습장 입구에 ‘확진자의 접촉대상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되었습니다.’라고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도내 2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광주 36번째 확진자와 접촉

### 접촉자 29명 '음성' ... 2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591명 모두 '음성'

대전 다단계판매업체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급속히 퍼지는 가운데 도내에서 연달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전북26번째 환자에 이어 28일 도내 27번째 환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27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 6월23일 광주 동구 소재 광복사를 방문했다. 이어 재차 6월26일 광복사 문화제 행

사에 참석, 광주 36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날 최초 오한증상이 나타나 해열제를 복용했다.

27일 광주 광복사 스님이 36번째 환자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자 다음날인 28일 오전에 덕진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실시했다.

이후 A씨는 검사결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현재 원광대병원 격리치료실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현재까지 27번째 확진자 A씨의 동선을 확인, 밀접접촉자 총 35명 중 29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 보건당국은 전북 26번째 확진자 B씨와 관련해 검체검사를 실시한 591명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고 지난 27일 발생한 대전 110번째 확진자 C씨의 접촉자 중 203명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해수욕장 개장’ 코로나 예방 만전

### 전북도, 7월 4일부터 순차적... 방역관리자 지정·현장대응반 등 운영

전북도는 도내 3개 시군 8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여 방문객을 맞이한다고 29일 밝혔다.

7월 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9일 고창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11일 부안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위도 해수욕장이 개장해 8월 16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시·군별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전년 대비 5명 증원된 132명의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16명을 신규 배치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거점 시설 32개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물(화장실, 샤워장 등) 및 정비 소독·환기를 철저히 하고 소독제를 비치하여 이용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수욕장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플래카드,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15분 간격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경각심을 줄 계획이다.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켜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사항은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열 등)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 ▲체액(침, 콧물) 배출 금지 ▲해수욕장내 음식물 섭취 최소화하기 등이다.

이울러, 전북도는 각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의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6일 코로나19 대비 해수욕장 실천방안 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고창은 드라이브 스투방식을 이용하여 방문객의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하고, 군산은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실외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자체 실정에 맞는 방안들을 내놓으며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요원 및 방역요원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말했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김충국(1967. 2. 14.생 2020. 4. 16.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전선사법부좌편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노단535 상속한정승인사법부좌편 전선

▶피상속인: 망 김충국(1967. 2. 14.생 2020. 4. 16.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호반8길 15, 105동 307호 (덕진동2가, 유토피아아파트)

▶공고인: 한금희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0. 6. 22.

▶공고기간: 2020. 6. 30. ~ 2020. 8. 29.

▶주소: (청구인) 한금희 전주시 덕진구 호반8길 15, 105동 307호 (덕진동2가, 유토피아아파트) 연락처: 010-8649-6603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